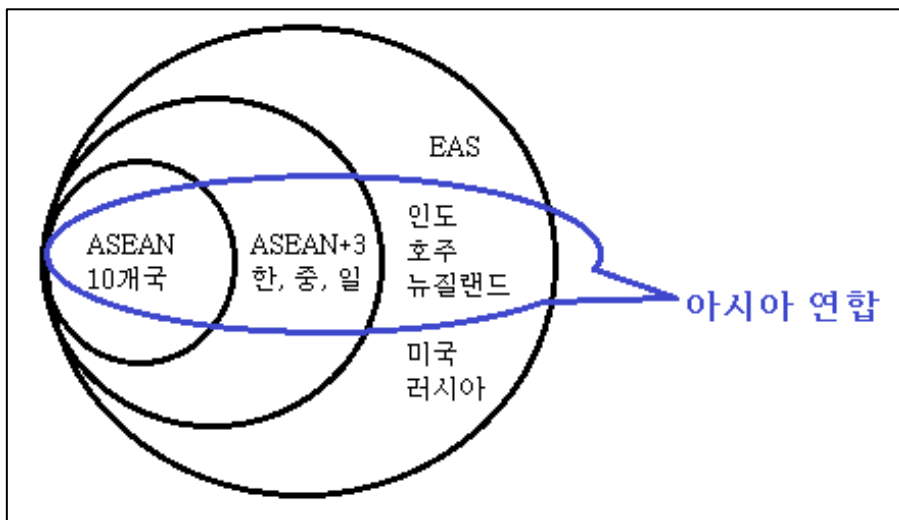


## 1. 아시아 연합의 가입 자격 요건

유럽의 상대적 개념으로 등장한 지리적 의미의 아시아는 우랄산맥과 보스포러스 해협, 수에즈 운하 동쪽의 유라시아 대륙과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방대한 지역이다. 새뮤얼 헌팅턴에 따르면 아시아에는 5개의 문명(중화, 일본, 힌두교, 이슬람, 정교)이 공존하고 있으며<sup>i</sup> 각 문명 내부에는 다시 각자의 문화와 역사를 가진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바탕이 되었던 문화적 유사성이나 지역적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아시아 지역통합의 어려움이면서 새로운 의미의 아시아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의 “아시아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정의되어야 하며, 새롭게 만들어가는 프로젝트”<sup>ii</sup>라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따라서 특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통합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시아 통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참여의지를 가진 국가들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지역통합으로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들이 아시아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3국과 동남아시아 ASEAN 10개 회원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총 16개국**이 아시아 연합의 원 회원국으로 적절하다 판단된다. 먼저 한, 중, 일 3국과 ASEAN 10개국을 포함하는 ASEAN+3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주도 산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발전 성공했거나 발전 과정에 있는 국가들로 이미 1980년대부터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크다.<sup>iii</sup> 특히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파과정을 통해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7년 ASEAN+3 정상회의 개최, 2000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체결에 이어 2010년에는 CMI의 다자화(CMIM)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에 따라 ASEAN+3 체제하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였고, 이 때문에 일본, ASEAN 일부 국가의 제안으로 2005년에는 그간 아시아 통합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해 온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추가로 참여하는 ASEAN+6 형태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출범하였다.<sup>iv</sup> 이처럼 EAS는 국가들의 의지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이므로 이를 아시아 연합의 기본 틀로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 인구의 49.8%, GDP의 27.4%, 무역규모의 27.8%<sup>v</sup>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

아시아 연합에 아시아 3대 경제대국인 중국, 일본, 인도가 모두 참여함에 따라 통합의 유인이 커지고 중-일간 패권 경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지정학·지경학적으로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ASEAN 회원국들은 오랜 지역통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ASEAN 중심주의(ASEAN centrality)에서 벗어나 아시아 연합의 제도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한국, 호주, 뉴질랜드는 중견국가로서 아시아 연합의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시아 연합의 범위

## 2. 아시아 연합의 구조

### ▶아시아 연합의 주요기구

이미 아시아에서는 ASEAN/ASEAN+3/EAS 정상회의와 장관회의가 다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아시아 연합은 1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정상회의와 분야별 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 연합 정상회의에서는 통합 방향과 공동 정책에 대해 합의하고 수시로 개최되는 장관회의에서 구체화한 뒤, 결정 사항을 각국 정부와 아시아 연합 차원에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ASEAN 사무국과 한, 일, 중 3국 협력 사무국(TCS)을 통합하여 아시아 연합의 각종 회의를 준비함과 동시에 공동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통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연합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WTO 분쟁해결양해(DSU)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널 방식을 준용하여 각국의 추천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함된 분쟁해결 명부를 사전에 작성하고 분쟁 발생시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여 패널을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하도록 한다. 이는 영토 분쟁과 같은 충돌이 무력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 ▶아시아 연합의 리더와 의사결정 방식

아시아 연합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아시아 연합을 대표하고 아시아 통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아시아 연합 회원국의 정치인, 외교관, 학자들 중에서 통합에 대한 비전을 갖고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순환제나 1국 1표의 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회원국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ASEAN 국가들에 치우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집행위원장 선출 및 각종 의사결정 방식으로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별 가중 투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회원국이 점차 자국의 정책결정권을 EU에 양도하면서 강대국들과 약소국들 간에 이해가 상충하게 되었다. 약소국들은 EU 내에서 강대국들이 밀려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반면, 강대국들은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참여할 경우 자신들의 실제 기여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EU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권평등원칙과 국력의 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Voting)를 도입하고 있다.<sup>vi</sup>

아시아 연합의 경우 정치, 외교 분야의 주권사항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제를 사용하되 아시아 연합 집행위원장의 선출, 구체적 정책대안 설정에서는 회원국의 인구와 경제력을 반영하여 총 100표의 범위 내에서 차등적인 투표수를 배분하되 소국들에 대해서도 2표 이상의 최소 투표수를 부여한다. 안건의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요구하되 과반수 이상 국가의 찬성을 필요하도록 함으로서 회원국들의 국력 차이를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	20	인도네시아	7	말레이시아	4	뉴질랜드	3
일본	15	한국	7	베트남	4	캄보디아	2
인도	12	태국	4	싱가포르	3	라오스	2
호주	8	필리핀	4	미얀마	3	브루나이	2

국가별 가중투표수

### 3. 아시아 연합의 필요와 실현 가능성

세계화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한편, DDA협상의 실패로 다자주의적 무역 자유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각 국가들은 지역차원의 공동시장 형성이나 양자차원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금융, 환경, 식량, 국제범죄 등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비전통안보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적 단위의 대응은 자유화의 이익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세계화의 충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sup>vii</sup>

협력의 경험이 적다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적 움직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가들이 점차 대외적 충격에 취약해짐에 따라 아시아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선 시장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역적 차원의 통합이 없었음에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역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중, 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제경제적 분석에 따르면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오겠지만 이는 국내적 차원의 거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의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역외 국가들에 대한 배타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가져오고 다른 지역에서의 시장 개방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시아는 시장통합형보다는 위기관리형 지역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다자간 협력의 효과가 큰 아래의 영역들을 우선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 -금융

이미 아시아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CMI 체결과 그 다자화에 성공하였다. 자본 자유화에 따라 한 국가의 일시적 외환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의존도가 높은 이웃 국가들로 단기간에 파급된다는 점에서 역내 다자 스와프협정을 체결하여 투기적 자본이동을 억제할 경우 통합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CMIM을 더욱 확대하여 그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 -환경오염

동아시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대기과 수질 오염이 심각하지만 하지만 경제성장의 필요성 또한 큰 지역이다. 이 때문에 환경보호 정책의 통합을 통해 환경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 -식량안보

중동의 자스민 혁명에서 보듯이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곡물 수급의 불안정성은 산업화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식량 비축량을 공유하는 것은 식량안보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국제범죄

동아시아 내 교류의 증가로 인해 국제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수사당국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법 집행이 가능하다.

세계화에 따라 특정 국가, 지역의 위기는 전세계로 파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위기 관리형 지역통합을 추구할 경우, 지역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외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 
- <sup>i</sup> 이희재 역, 새뮤얼 헌팅턴(1997), 『문명의 충돌』, 김영사
- <sup>ii</sup> Guy Sorman(2009), “Towards Asia’s Century”, Keynote speech for the first Conference of Asia Economic Community Forum, Nov. 11, Incheon, Korea.
- <sup>iii</sup> 하영선, 남궁곤(편)(2012),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p. 314.
- <sup>iv</sup> 최영종(2012), “글로벌 위기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1호, pp. 87-121.
- 외교통상부(2011), 『아세안 개황』, 외교통상부
- 조갑제(2010), “ASEAN+3 발전과정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의 전망”, 『사회과학논총』 제29집 2호, pp. 47-63.
- <sup>v</sup> WTO(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Geneva
- <sup>vi</sup> 박덕영 외(2012), 『EU법 강의』, 박영사
- <sup>vii</sup> 최영종(2012), “세계화, 지역화, 동아시아”, 『20세기의 유산 21세기의 진로』, 사회평론, p. 376.

## 참고문헌

- 박덕영 외(2012), 『EU법 강의』, 박영사
- 외교통상부(2011), 『아세안 개황』, 외교통상부
- 이희재 역, 새뮤얼 헌팅턴(1997), 『문명의 충돌』, 김영사
- 조갑제(2010), “ASEAN+3 발전과정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의 전망”, 『사회과학논총』 제29집 2호, pp. 47-63.
- 최영종(2012), “글로벌 위기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1호, pp. 87-121.
- 최영종(2012), “세계화, 지역화, 동아시아”, 『20세기의 유산 21세기의 진로』, 사회평론
- 하영선, 남궁곤(편)(2012),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 WTO(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Geneva